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4
----------	------

발의연월일 : 2024. 8. 6.

발 의 자 : 김현정 · 김 윤 · 장종태  
권향협 · 황정아 · 김남근  
박홍배 · 박희승 · 오세희  
임미애 · 김기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년전보다 7.7배인 2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은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는 더 이상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장치가 허술한 상태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몰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이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

와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중개거래 금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 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적인 분쟁예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 기재사항)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그리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안 제12조).
- 아. 그 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자.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

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0조).

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0조 및 제31조).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32조).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 등).

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

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위반행위 또는 그 우려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안 제39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 접수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직접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수수료 지급, 정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거래를 말한다.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 지원, 고객관리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각종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7.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8. “광고비”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검색·배열순위를 높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에 광고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외의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

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광고비의 주요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조건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

5.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다른 법령의 준수 등에 의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7.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수집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온라인 중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및 제2항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의 공개 절차)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7일 이내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서면의 제공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서면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2항의 회신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개계약내용 변경의 사전통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색 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4. 부당하게 다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리한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제한·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정산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원가에 관한 정보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

화 등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경영정보의 요구범위를 최소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중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행위
2. 제26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32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제18조(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사용 및 작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온라인플랫폼이용사업자단체”라 한다) 간의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온라인플랫폼이용사업자단체는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제정·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로 승인할 수 있다.

1. 해당 제정·개정안이 이 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없을 것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설정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 제정·개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0조(자율규약)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1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위촉일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  
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  
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  
을 각하한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  
정으로 해당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  
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6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5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5조에 따른 조정사항이 아닌 사  
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  
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  
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  
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  
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  
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5조제1항에 따  
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9조(협회의 조직 등)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협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고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신고 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34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또는 향후 재발 방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6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⑦ 이 밖에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금지청구 등) 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및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41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 제4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4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6.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③ 제4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8조(고발) ①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제한·중지 및 중개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에 따른 조사 및 제32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한다.

제5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 및 제4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